

權不十年... 민주 '야당 설움' 톡톡

〈권불십년〉

다음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의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국정감사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야당의 공격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 부처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각종 이유를 들어 '낙장 제출'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내부 자료가 있음에도 공식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

실제로 일부 부처에서는 각종 정책 발표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정책 발표 당일에야 담당 실무자를 보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부처 장·차관

정부 부처들, 국감자료 요구에 능장·거부 잇따라

담당관들도 '안면 몰수'... 기초자료 확보도 어려워

이나 실무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둬 정치적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감자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 일부 보좌진은 자료 확보가 쉽지 않자 친분이 있는 한나라당 보좌진에 정부 부처의 자료 협조를 요청

하고 있다.

전남지역 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은 "분명히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처에서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에게 대신 자료 요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알고 지내던 부처 담당관들도 야당 신분이 되자 '안면 몰수'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전직 장·차관 출신 민주당 의원

들은 부처 내의 인맥을 활용,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야에 보좌진들을 현장을 투입, 자료 확보와 문제점 파악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일부 보좌진들은 정부 부처의 민감한 부분을 거론하며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감에서 '가만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까지 자료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지역 모 의원은 "여당 시절에는 자료 요구를 하면 정부 부처에서 내부 비밀 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했으나 이제 먼 옛날의 얘기일 뿐"이라며 "요즘은 기초적인 자료도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야당의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盧 약속 위반, 2003년 남북정상회담 무산”

박지원 의원 전남대 특강서 비화 공개



참여정부 집권 초기인 2003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간 돌발 논의가 진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부 행정부장과 베이징 회동까지 추진됐으나 당시 우리측의 약속위반으로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박지원(목포시) 의원은 1일 전남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그 후 8년'이라는 특강에서 2003년 초 남북 정상회담 무산 과정에 대한 비화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초 인수위 때 노 당선자측은 북한과 접촉,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논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실무간에 특사교환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베이징에 온 장성택 부장을 (우리측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상회담을 권유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퇴임하기 3년 전, 2년 전이라도 정상 회담이 이뤄졌다면 남북 관계는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7년 10·4 선언 내용 가운데 '6·15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은 재임시 6·15를 기념일로 지정해야 했다"면서 "당시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실현 가능한 사안을 지키지 않고 차기 정부에 10·4 선언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 합의 내용은 햇볕정책을 원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6·15와 10·4 선언 준수 의사를 밝히고 조건 없는 식량 지원 등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북핵을 없애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연령, 흡연, 음주, 복부비만, 수면 시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건강이 완쾌됐든 아니든 후계구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것인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미 FTA 비준안 다음주 국회 제출”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해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라면서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의 미국 측 처리 전망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내년 3월6일까지 유호한 잠정 예산법안이 통과돼 (한미 FTA 통과가 기대됐다)"라면서 "레이더 세션(정권교체기에 열리는 의회)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제출은 국회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의 처리문제에 대해 "이것은 하나의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면서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측의 비준동의는 국내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TA는 오는 7월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연남뉴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당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종부세 개악 저지 및 부가세 인하 결의대회'에서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남뉴스

민주 '종부세 완화 저지' 투쟁

의원회관 앞 결의대회 가져...스티커 부착 캠페인도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종부세 개악저지 및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본격적인 대역(對與) 강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특히 이날은 종부세 무력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경우 지방 교부금이 감소해 결국 지방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위원장까지 소집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돼 한 자리에 모였다"며 "한나라당이 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수에 의한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대통령 눈에는 고생하는 99마리 양은 안 보이고 풀 좋은 곳에서 사는 1마리 양만 보이는 것 같다"며 "온 국민과 힘을 합쳐 1% 부자를 위한 특권층 감세를 저지하고 열심히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운물을 던져 막아내야 할 법안으로 분류했다. 향후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

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뚝뚝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국의 지역 단위로 서명운동을 실시해 국민적 여론 조성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낮부터 종부세 개악 저지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안이 11월께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감안, 서명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을 뒤로 늦췄다. 대신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의 차량에 종부세 완화 반대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종부세 대폭 완화에 반대하는 아권 국회의원회와 시민단체 간 연석회의도 결성됐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이용섭, 김상희, 이미경, 민주노동당 강기갑, 이정희, 자유선진당 이상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과 54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등이 동참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 선관위, 자치단체 소유지 무상 사용”

광주 서구·담양·장흥 등 60곳... 年 26억 부당이익

국회 행안위 이윤석 의원 밝혀

전국 265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광주 서구, 담양, 장흥, 고흥, 장성 등 60개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매년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5개 지역 선관위 가운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선관위를 비롯해 부산 수영구 등 24개 지역 선관위가 자치단체 소유 토지 총 6천298㎡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도선관위와 경남도선관위가 해당 토지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광주 서구 ▲담양, 장흥 ▲부산 수영구 ▲경기 동두천, 이천, 포천 ▲강원 동해, 태백, 정선, 양구 ▲충북 보은, 괴산 ▲충남 보령, 서산, 금산, 서천 ▲전북 정읍 ▲경북 안동, 영천, 상주, 청송 등 22개 시·군·

구 선관위도 지자체 부지를 무상 이용했다. 또 별도의 청사가 없어 지자체 청사 사무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사용하는 지역 선관위도 고흥과 장성 선관위 등 36개에 달했다. 또 이들 가운데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군포시 등 경기도 지역 4개 시·군·구 선관위는 개량기 설치 곤란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광역시·도의 경우 연 5천880만원, 구·시·군의 경우 3천480만원의 임차료를 책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임차료만으로 선관위가 연간 1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며 부지 무상사용 비용인 약 9억원을 감안하면 연간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선관위에서는 지자체에서 반환 요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수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0255300-9999